

강현수. 2010.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이동민*

20세기 이후 급속한 속도의 도시화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950년 이래 세계 인구 가운데 도시 거주자는 50년간 3배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29억 명을 기록하였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30년에는 50억 명에 도달하여 전 세계 인구 가운데 60~80%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된다(Knox & McCarthy, 2005: 526).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특히 두드러진다. 조명래(2009: 89 재인용)에 따르면 한국의 도시화율은 90%에 육박하며, 이는 선진국들의 평균적인 도시화율인 75% 수준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종합하면 오늘날 도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이자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같은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가 사람들이 ‘살 만한’ 공간인가, 도시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의 중요성은 간과하기 어렵다. 하지만 도시가 정치권력이나 국가, 자본, 특정 계급 등에 종속된 공간이라면, 도시 공간은 도시인의 인권이나 행복 추구는 배제된 채 단순히 거주자를 대상으로 수용하기만 하는 ‘거주지’의 의미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도시와 도시인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조명래(2009: 90)는 1980년대 후반 혹은 1990년대 초반부터 도시와 사회적 삶의 결합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박사과정(ldmin1988@snu.ac.kr)

이 깊어졌으며, 1997년 환란위기를 거치면서 도시적 삶은 자본주의적 법칙에 순응하는 것(예: 고용관계의 양극화, 상품소비관계의 심화 등)으로 전면 재편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진태(2010: 35) 역시 2000년대 이후 서울시의 장소마케팅 전개과정에서 도시 공간이 교환가치가 우세한 성향을 띄면서 시민이 누려야 할 사용가치의 공간은 약화되거나 주변화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논의는,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아직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 평가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도시란 인간에게, 우리에게 어떤 공간인가? ‘불도저’ 행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도심개발과 뉴타운 정책으로 인해 수십 년간 살아오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물론, ‘전세대란’이 강 건너 불 이야기로 들리지 않을 사람이라면 도시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며, 자신들이 도시라는 공간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행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는 오늘날 도시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준다.

이 책은 인권이라는 문제를 추상적인 사회정의와 정치의 수준을 넘어, 도시라는 공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장에서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도시학자인 르페브르의 도시론을 중심으로 도시의 권리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살펴보고 있다. 2장에서는 도시의 권리에 관한 국내외의 실천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갖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우리나라 도시의 권리 운동이 가지는 가능성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나라 도시가 가진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장별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1. 68년 파리와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

르페브르에 있어 도시란 단순히 촌락과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며, 도시 사회(urban society)란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양식이 도시화된 사회를 의미한다. 한편 도시 공간은 자본주의에 의해 상품화되어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자본과 권력이 집중된 중심부와 서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주변부가 분리되고 파편화되면서 자본주의 사회체제가 약화되는 모순이 일어나기도 한다. 즉, 도시는 다분히 자본주의적인 공간인 동시에, 혁명의 원천이라는 속성도 함께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르페브르는,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의 주체는 도시라는 일상생활의 영역이자 자본주의적 공간 내에서 착취·지배당하는 ‘주변화된’ 서민 대중들이라고 파악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논의는 1968년 당시 프랑스의 도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한다. 당시 프랑스 정부가 도시 빈민들의 주거 대안으로 건립한 대규모 임대 주택 단지인 ‘그랑 앙상블(gran ensemble)’은 오히려 그들을 도시와 사회의 중심으로부터 배제·격리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르페브르는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도시에서 자본의 이윤과 직결된 교환 가치가 사람들의 사회적 필요에 관한 사용 가치를 압도하고 있으며, 도시는 ‘베드 타운’이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극도로 단순화된 거주 기능만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논의를 이끌어내었다.

르페브르가 주장한 도시에 대한 권리의 주된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모두 도시에서의 일상적 실천에 관한 것들이다. 첫째, 도시 거주자들이 스스로의 필요와 가치에 입각하여 공동으로 만들어온 도시에 관한 ‘작품으로서의 도시와 작품에 대한 권리’이다. 둘째, 사적 소유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교환 가치가 아닌 사용 가치를 최대화와 관련되는 ‘전유의 권리’이다. 셋째,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 공간에 관한 의사 결정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참여의 권리’이다. 넷째, 도시인이 도심에서 배제되지 않고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관한 ‘도시 중심부에 대한 권리’

이다. 다섯째, ‘차이의 권리와 정보의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의 실천은, 자본주의가 만드는 배제와 억압의 체계모니에 저항하고 도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일상적인 투쟁이기도 하다.

르페브르의 논의는 최근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도시 관련 정책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책의 서문에서 언급한 용산참사나 두리반 철거반대 투쟁,¹⁾ 서울시민과의 소통과 참여가 부재한 가운데 강행된 신자유주의 도시공간을 지향하는 ‘디자인 서울’ 정책(황진태, 2010: 45)과 같은 사례들은, 르페브르의 문제의식과도 적지 않은 유사점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도시인의 권리가 배제된 자본과 정치권력 일변도의 도시정책이라는 성격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1968년 프랑스 파리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은, 21세기에는 파리가 아닌 대한민국 서울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2.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천 운동

제2장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천 운동에 관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2001년 제정된 브라질의 「도시법(City Statute)」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도시법을 주민 참여를 포함한 도시의 민주적 관리와 무허가 정착촌의 양성화를 위한 법적 수단들을 규정하는 등, 도시권을 명시적인 집합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실정법으로 법률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이 외에 캐나다 몬트리올, 스

1) ‘두리반’은 서울 홍익대 근처에 위치했던 칼국수집으로, 지역개발을 명분으로 1억 원 상당의 상가권리금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이사 비용 300만 원만 받고 나가라는 통지를 받아 이를 거부하고 2009년 연말부터 음악회, 영화 상영 등으로 구성된 문화제 성격의 철거 반대 투쟁을 벌여오고 있다(본서 8페이지에서 인용).

페인의 바르셀로나, 호주의 스톤링턴 등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적극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헌장의 제정 운동, 그리고 UN의 도시에 대한 권리 프로젝트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도시에 대한 권리 운동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3.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의 유용성과 한계

제3장에서는 ‘도시의 시민권’을 중심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는 도시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정치적 소속감이 국가 중심에서 도시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는 변화와 더불어, 자국 경제의 중심지를 넘어 범지구적 차원의 자본과 노동 집중지로서 세계 경제 활동 전반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세계 도시(global city)의 대두라는 현상을 도시 단위 시민권이 대두하게 된 사회적 맥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도시 공간이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시민권 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거주권, 인권 등 도시에서의 권리 찾기에 눈뜨고 행동하게 되면서, 도시는 이들에게 연대감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의무와 책임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도시가 인권과 시민권의 실천 운동을 위한 연대감을 형성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논의는, 인권의 신장과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더욱이, 후술하겠지만 아직도 인권 수준이 경제 수준에 비해 뒤쳐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에 일어난 촛불시위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도시공간 속에서 연대하여 일어난 만큼, 도시는 우리나라의 인권 신장을 가져올 수 있

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고, 또 실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장에서는 도시와 도시 거주자라는 용어의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판, 그리고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이 여성 차별적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까닭을, 도시라는 공간이 단순히 개인들이 의미 없이 모인 ‘거주 공간’을 넘어서 권리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연대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 즉, 개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다양한 공간 규모에서의 권리 주장이 실현될 수 있는 공간 단위가 바로 도시인 것이다. 이 같은 고찰을 통해서 이 책은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이 추상적인 구호나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도시 공간에서 의미 있고 발전적인 대안으로 실천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것을 위한 필요조건을 제시해 주고 있다.

4. 우리나라 도시 권리 운동의 가능성과 과제

4장은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이 경제 성장 수준보다 뒤쳐졌다는 문제 의식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승만 독재정권과 군사독재 시절은 물론, 최근 2~3년간 이루어져온 촛불 시위 탄압,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인권 실현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도시 권리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한다. 용산 참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은 철거되는 상가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어떠한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지는커녕, 강제 철거의 관행으로부터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수준이다. 도로 건설 등 자동차 위주의 도시 정책으로 인해 시민의 보행권과 장애인 이동권이 제약받고 이주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

하는 현실도 이러한 문제점을 뒷받침한다. 물론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으로써의 시민운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오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요원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실로 인해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저해하는 요인은 합법인데 반해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은 불법이 되어 운동의 주체들이 범죄자로 처벌받는 모순이 아직도 빚어지게 되는 또다른 문제점이 이 책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에 속에서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실천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상상력 발휘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자본의 논리를 시민의 권리로 비교적 쉽게 끌어올 수 있는 디자인 운동이라든가 지명 붙이기 운동 등이 그 쉬운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도시 디자인과 지명에 대한 권리찾기의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도시 권리 운동의 과제로 도시를 공동체로서의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포용과 같은 것들을, 앞으로의 도시 인권 운동이 염두에 두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디자인 토론집단인 FF그룹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간 정책에서 서울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문제의식 하에,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판에 시민들의 의견이 적혀진 스티커를 붙이는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 문화적 저항을 펼친 바 있다. 이를 통해 FF그룹은 시민들과 서울시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디자인서울토론클럽)를 여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황진태, 2010: 53~54). 이같은 사례는, 이 책이 언급한 다양한 상상력 발휘를 통한 도시에 대한 권리 요구가,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도시공간에서의 실천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같은 노력이 일부 집단만의 특별한 전략에 그치지 않고 도시 공간을 통한 인권의 실천과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는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공동체적 공간이자 타자와 소수자에 대한 포용의 장이라는 이 책의 메시지를 항상 명심하고 실천해야만 할 것이다.